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모의고사] (제1회 : 2020. 02. 26 시행)

구 분	교 시	문제형별	시 간	시 험 과 목
1차	1교시	A	75분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수험번호		성 명	
------	--	-----	--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 내 문제형별의 동일여부 및 시험문제지의 총면수·문제번호 일련순서·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 선택하고,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시험점수 및 결과는 익일 오후부터 학원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본 모의고사는 시험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요인을 최소화 하고, 시험장에서 시간안배 훈련과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필수 모의고사입니다.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민법(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명령·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없다.
- ③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④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5년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1995. 3. 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 3. 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③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④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5. 1993.3.30.에 출생한 甲은 2011.3.30.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인 甲은 스스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③ 甲이 2013.3.30.에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날 이를 소비하였다면 법정주인이 되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2012.3.30.에 甲은 스스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원이 실종선고 및 그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설립등기 후 발생한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퇴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총회의 다른 결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④ 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8.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이는 무효이다.
- ③ 파산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④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 ⑤ 정관에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정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9.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

11. 다음 중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경우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 ②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그의 처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약정
- ③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
- ④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
- ⑤ 채무자에 대한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 ③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라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주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1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
-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1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급부한 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1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더라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1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④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약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 ⑤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하였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18.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다고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0.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 ① 2014년 3월 23일 24시
- ② 2014년 3월 24일 24시
- ③ 2014년 3월 25일 24시
- ④ 2020년 3월 23일 24시
- ⑤ 2020년 3월 24일 24시

2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②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2.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1개월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은 언제 만료하는가? (단, 2월의 말일은 28일이다)

- ① 3월 28일 오후 2시 ② 3월 28일 오후 2시 ③ 3월 30일 오후 12시
- ④ 3월 31일 오후 2시 ⑤ 3월 31일 오후 12시

2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 ②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안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 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②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는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④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2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③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 없다.
-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

26.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이/가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 ① ㉠ - 행정관행
- ② ㉡ - 신뢰보호의 원칙
- ③ ㉢ - 상대방
- ④ ㉣ - 법률에 의한 구속
- ⑤ ㉤ - 대외적인 구속력

27.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과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법령이다.
- ② 건설업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면허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한다.
- ③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조세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④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 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허용된다.

28.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인 지배복종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 ② 우리나라 판례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 ③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의회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성립된 이론이다.
- ④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⑤ 울레의 수정설은 기본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29.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는 입장이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연금수령자격이 없는 자가 수령한 연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 ④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 ⑤ 개인의 공법상 부당이득도 성립될 수 있다.

30.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즉시 거부할 수 있다.
- ②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③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 ④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더라도 그 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3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⑤ 법규명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2.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면허 : 허가
- ② 토지거래허가 : 인가
- ③ 하천점용허가 : 특허
-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 인가
- 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 인가

33.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가는 처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 ② 인가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③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인가는 언제나 신청을 요하는 행위이다.
- ⑤ 인가의 예로서는 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의 인가 등이 있다.

34.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조건
- ② 철회권 유보
- ③ 법률효과일부배제
- ④ 법정부관
- ⑤ 사후부관 유보

3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만일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이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④ 부담부 행정행위인지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부담을 붙이행하면 이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3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 ④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에게 하여야 하며 동거자나 사무원 등에게 교부할 수 없다.

37.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②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불가쟁력은 당연히 발생한다.
- ③ 불가쟁력은 실질적 확정력이고 불가변력은 형식적 확정력이다.
- ④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나, 불가변력은 주로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 볼 수 있다.
- ⑤ 무효인 행정행위도 재송기간이 경과하면 불가변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쟁력은 발생한다.

38.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

-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처분
-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 ㉢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9.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해제조건의 성취
- ② 부담의 불이행
- ③ 사실관계의 변경
- ④ 근거법령의 개폐
- 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40.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일정한 처분의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고 있다.
-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비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내이나, 제3자가 이의신청할 시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2.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상 즉시강제
- ② 행정상 강제징수
- ③ 대집행
- ④ 직접강제
- ⑤ 이행강제금

43.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 ②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가 있다.
- ③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 ④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4.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교통할아버지의 위탁범위를 넘은 교통정리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 운전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 ④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⑤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② 선급보상의 원칙
- ③ 금전보상의 원칙
- ④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의 원칙
- ⑤ 개인별보상의 원칙

46.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행정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③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고 한다.
- ④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된 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 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7.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③ 국유일반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
- ④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부과처분
-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48. 다음 중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③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⑤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국회사무총장을 피고로 한다.

49.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① 자박력
- ② 기관력
- ③ 형성력
- ④ 기속력
- ⑤ 집행력

50.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것은?

- 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에 대한 소송
-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 ④ 국유임야 대부 시 대부료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 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전쟁이 발생한 경우
- ②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④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한 경우
- 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52. 외교통상부의 통상사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전용
- ② 이용
- ③ 이체
- ④ 이월
- ⑤ 수입대체경비

53.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관한 내용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재규제의 주장
- ② 재집권화의 중요성 강조
- ③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 ④ 분절화의 지양
- ⑤ 구공공관리론의 필요성 강조

54.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구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 ② 조세 감면과 완화
-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 ⑤ 정부의 역할 증대 찬성

55. 조직의 유형 중 기능구조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중복과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 ④ 환경변화에 좀 더 신속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
- ⑤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56. 공익에 관한 학설 중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다.
- ②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③ 국가 우월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정책결정과정의 산출보다는 투입기능을 중시한다.
- ⑤ 사회공동체를 위한 이익이 공익이라는 관점이다.

57. 정부규제는 규제에 대한 개입 범위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
- ②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띠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을 띤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 ④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58.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가 아닌 것은?

-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④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⑤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59. 정책의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보다는 당해 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
-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③ 내적 타당성
- ④ 외적 타당성
- ⑤ 내용적 타당성

60. 다음에 해당하는 직위분류제의 개념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① 직위 ② 직급 ③ 직렬
- ④ 등급 ⑤ 직무

61.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 체제의 성격이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 ②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 ③ 전통적으로 국회는 정부예산을 통제·감독한다고 인식되었으며, 최근에도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 증액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④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진다.
- 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엄격한 예산심의라는 특징을 갖는다.

62.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조직구조가 더욱 관료제적으로 변하게 된다. 관료제적 통제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조직 과정을 규칙과 절차를 통해 더욱 공식화·표준화시킨다.
- ② 실질적인 자유재량권이 주어진다.
- ③ 업무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하여 통제력의 손실 없이 더 많은 분권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 ④ 조직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직구조가 더욱 기계적 유형으로 변한다.
- ⑤ 공식화를 제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63.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⑤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이다.

64.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비비 편성
- ② 추가경정예산
- ③ 특별회계 운용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65.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比情誼性)을 저해한다.
- ⑤ 인간을 조직의 부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다.

66.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 ② 기업식 정부운동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 ⑤ 사회문제해결을 강조한 행정이론이다.

67.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교행정론은 집단보다 행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채택한다.
-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류를 통한 체제의 지속적인 균형을 중시한다.
-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 ⑤ 신제도론적 접근은 제도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68.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 ⑤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로는 플라톤, 루소 등이 있다.

69.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 ②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직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채용·승진 등 인사배치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 ④ 직위나 직무의 변화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 ⑤ 개방형과 적합한 제도이다.

70.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 ⑤ 이슈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이다.

7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 ⑤ 자율적 인간관

7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②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⑤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73.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 ⑤ 중·장기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74.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 ⑤ 예산의 이체는 자금의 책임소관을 변경시켜주는 제도이다.

7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 ⑤ 상황론적인 리더십은 리더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강조한다.

수고하셨습니다